

성명서

법무부는 지진.태풍피해국 이주노동자를 기만하는 출국유도 정책을 중단하라!

최근 버마와 중국에서 태풍과 지진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버마인, 중국인뿐만 아니라 고향을 떠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도 이는 충격적인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쓰나미 지진해일피해, 파키스탄 지진피해, 방글라데시 수해 피해 등 아시아 각국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이주민들은 본국의 가족들 안부에 피가 마른다. 또한 한국에서 고된 노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십시일반을 성금으로 모아 본국으로 보내곤 한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무부는 기만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16일) 법무부는 "지진 등 피해국가 국민, 마음 놓고 고국 다녀오세요."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중국과 버마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에 의해 공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고, 미등록자(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2004년 12월 동남아시아의 쓰나미 피해국민 이주노동자와 2005년 10월 파키스탄 지진피해 이주노동자는 법무부의 지진태풍피해 국민을 돕기 위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믿고 출국했으나 지금까지 재입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3년 한시적 특별조치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법무부의 정책을 신뢰하는 이주노동자는 없다. 지진, 태풍 등의 재해 발생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구호와 복구지원활동이 벌어질 때마다 법무부는 오히려 이를 피해국가출신의 미등록(불법체류자) 이주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위해 인도주의 운운하며 한시적 특별조치라는 기만적 정책의 대대적 홍보에 열중해왔다. 법무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 나서 한시적 특별조치의 실효성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다.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선전하며, 또 다시 중국과 버마의 자연재해로 아픔을 당한 이주노동자를 기만하는 작금의 행태가 국민의 혈세로 외국인 정책본부라는 거대조직으로 승격된 법무부의 외국인정책이라는 현실에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자진 출국 시에는 범칙금을 면제해 주고 있어 이번 한시적 특별조치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정책이다.

이런대도 법무부는 피해 국가 이주민들에게 큰 시혜를 베푸는 듯한 보도 자료를 통해 이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외노협은 이번 기만적인 정부 정책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이주민이 있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정부는 진정으로 한국 이주민 정책과 이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2004년 이후 동남아시아 쓰나미 지진해일 피해국민대상 한시적 특별조치에 따른 출국자와 재입국자 수를 공개하라!

1. 태풍지진피해국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내쫓기 위한 기만적 한시적 특별조치를 철회하라!

1. 비인간적인 인간사냥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강제추방정책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강구하라!

2008. 5. 2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살롱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살롱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i=